환경운동의 전략으로서 담론과 연대*

최병두·이근행
(대구대 교수, 지리학)·(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

1. 머리말

환경운동은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생태적 위기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적 배경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이 일정하게 허용되는 정치적 기회구조 및 시민사회의 동원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왔다(최병두·이근행, 1999). 일반적으로 환경운동은 현재의 위기가 지구 자원과 생태계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성장중심의 사회·경제적 체계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현재의 성장 패러다임을 상생과 순환의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운동은 개별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원의 동원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환경적 또는 생태적 담론을 확산·심화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생태 담론을 통하여, 환경운동은 자본주의적 성장일변도의 국가 정책과 과학기술, 생산성 향상에 대한 맹신의 문제점을 파헤쳐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데서부터, '생태담론'을 통해 생태적 가치관과 생활양식 그리고 사회구조의

* 이 논문은 교보재단 지원과제인 '연대활동을 통한 환경운동의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정·축약한 것임.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사회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

환경운동은 이러한 전략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관심과 여러 차원의 조직을 만들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들 조직간에 다양한 형태의 연대망 또는 네트워크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은 환경문제의 총체적 특성에 따라 환경운동 내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부문들, 예로 노동, 여성, 소비자, 문화 부문 등 여타 사회운동과도 연대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개인 또는 단체)이나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 시민들, 나아가 국가나 지방정부, 시장과 기업들과도 일정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한다. 환경운동단체들 내 또는 타부문 운동단체들과의 연대, 즉 '운동 네트워크'와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 내 또는 그외 관련 기관들과의 정책적 협력, 즉 '정책 네트워크'는 환경운동의 전략과 과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고리이다. 다분화된 현대사회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이념에 기초한 하나의 조직이 모든 환경문제들을 다룰 수 없으며, 따라서 다른 조직들과 이슈 및 인식틀 또는 가치, 그리고 동원가능한 인력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운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환경운동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담론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기존의 다양한 환경운동이 운동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담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연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개념적 및 경험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운동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환경담론에 관한 연구는 환경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운동 참여자들이 어떠한 공동의 언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 운동의 목적을 어떻게 유의미화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특정한 신념의 구축이나 의미의 형성을 통해 실제 행위를 수행해나가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에 대한 연구는 운동의 주요 실천 전략으로서 연대활동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고, 연대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천적 환경운동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서로 상이한 부문들, 특히 시민사회, 국가, 시장의 환경네트워크 형성의 기초 연구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녹색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역할과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환경담론 및 연대와 관련된 이러한 목적과 의의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환경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 일반에서 강조되는 주요 요소들과 특히 환경담론 및 운동 네트워크의 의의를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환경운동의 담론 형성과 연대활동이 실제 이루어진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사례로, 동강 댐 반대운동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활동이 논의되고 있다. 끝으로 양 사례에서 나타난 환경운동의 담론 전략과 연대활동의 의의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환경운동의 전략적 성과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사회운동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환경운동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사회운동의 한 유형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모순인 노동/자본간의 관계 속에서 첨예한 대립관계를 형성했던 노동운동은 지난 20세기 동안 생산성의 급속한 증대와 증대된 사회적 부의 재분배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제도화 과정을 통해 점차 그 중심적 역할을 퇴색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체제의 영향력이 생산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생산조건(즉 환경)의 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들, 예로 평화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환경운동은 사회구성원들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과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문의 운동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

은 자연환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제에 내재되어 있으며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재정립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식 전환(즉 생태적 가치 지향)과 더불어 인간간의 관계 재구성(민주적 평등)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다른 부문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환경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우선 사회운동론 일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정치 이론에서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은 크게 2가지 유형, 즉 자원동원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과 정체성 지향론(identity-based theory)으로 구분된다. 자원동원 이론은 다원주의적 입장에 기초한 것으로, 운동의 목적이나 이념보다는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구체적인 운동의 형성 및 전략적 전개 과정 자체에 주목하면서, 특히 사회운동조직을 위한 자원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예로 개인을 어떻게 조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원하는가에 초점을 둔다(Jenkins, 1983; 사회문화연구소, 1993: 제9장; 틸리, 1995: 제3장; 임희섭, 1999: 제7장 등 참조). '자원동원론'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운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강조되었던 사회적 갈등과 불만은 사회적 권력관계의 항상적 산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운동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사회운동은 오히려 운동의 조직, 기회구조와 같은 넓은 의미의 운동 자원에 의존하며 '합리적으로' 이해를 추구하는 행위자(개인 또는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운동의 전개과정은 어떤 특정 이념에 의해 고취된 집단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상호 대립적 이해를 가진 집단들간의 관계로 대체되며, 이론의 초점은 구조적 배경 대신 운동조직, 이해, 동원가능 자원, 그리고 정치적 기회와 같은 '객관적 변수' 및 다른 집단과 정치적으로 교섭하는 데 필요한 '전략'에 맞추어진다.

이러한 자원동원론은 미국에서 발달한 다원주의적 이론의 한 변형으로, 사회운동은 단순히 분노하는 군중의 비조직적 집단행위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협상하는 조직적 주체들의 참여행위로 개념화된다. 특히 실제 사회운동의 등장과 발달은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 자원(인적·물

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제도적·의식적 자원 포함)의 존재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 이론은 현실적인 설명력을 가진다. 그러나, 자원동원론자들은 사회운동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시각을 가질 뿐이고 운동 내부에 있는 운동주체의 관점을 취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운동과 이익집단의 활동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운동의 내용과 지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자원동원론은 운동 전략의 관점에 초점을 둠으로써 새로운 사회운동에서 강조되고 있는 연대성(solidarity), 정체성(identity)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다.

정체성 지향 이론은 후기 자본주의 또는 탈산업사회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서구문화에 근거를 두고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신사회운동론의 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문화연구소, 1993: 제8, 9장; 임희섭, 1999: 제8장). 이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운동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권력 형태와 이에 따른 억압과 소외 등 현대 서구문명이 드러내고 있는 새로운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시민사회의 확장과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또는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 성찰성의 증진과 정체성의 추구 등에 기초한다. 이와 같이 정체성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은 과거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 또는 이익집단의 활동과는 달리, 사회적 부의 배분에서 더 큰 몫의 요구나 부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배경으로 인식되었던 정치경제체제의 전복 등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율과 정체성, 참여와 연대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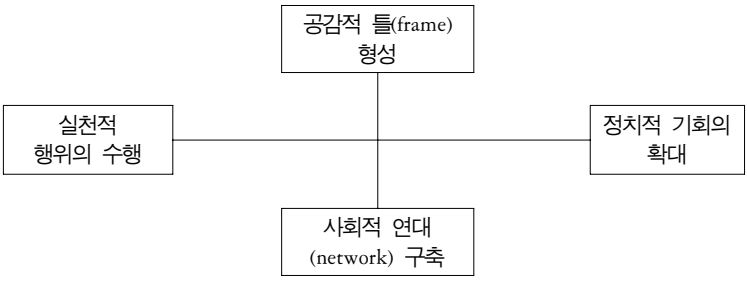
정체성 지향 이론은 자원동원 이론과는 달리 시민운동의 가치지향성,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 및 정체성 추구 등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시민들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연대활동 등을 강조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이론은 새로운 사회운동을 과거의 운동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힘 관계에 내재된 불평등의 메커니즘 및 이의 표출로 인한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즉 정체성 이론을 포함하여 신사회운동론은 최

근 등장하는 사회운동의 새로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지만, 새로운 사회운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동원) 전략들간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운동의 다양한 유형들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회운동에 대한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자원동원을 강조하는 미국 학파와 정체성 지향에 초점을 두는 유럽 학파 간의 상이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자원동원론과 정체성 지향론은 각각 그 자체로서 장점과 동시에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간에 어떤 이론적 연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로(Tarrow, 1994)는 이를 위해 사회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4가지 측면 또는 요소로서 문화적 틀, 사회적 네트워크, 행위 레퍼터리(repertoires), 그리고 정치적 기회를 제시했다(<그림 1> 참조).[1)]

첫째 요소로서 문화적 틀은 기존의 문화적 신념에서 전략적으로 유의한 가치와 상징들을 선정하여 의사소통의 공동적 언어로 활용하고, 나아가 집합적 행동을 통해 이들을 새로운 사고양식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담론의 '틀지우기'(framing)라고 하며, 특정 행위를 위

<그림 1> 사회운동의 4가지 주요 요소



1) 이러한 4가지 측면에 기초하여, 미국의 와렌 카운티(Warren County)에서 처음 전개되었던 환경정의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McGurty(2000) 참조.

한 의미의 형성 또는 전체 운동 목적의 유의미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틀에 따라 문제가 진단되고, 비판이 제기되며, 해법이 제시된다. 또한 이에 따라, 운동의 주체는 자신의 의식을 심화시키고 공고히 하는 한편 새로운 참여자를 운동 속으로 끌어들이거나 운동의 의미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게 된다.

둘째 요소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사회운동의 전개는 운동에 주체적으로 결합하거나 특정 사안별로 (신체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계망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망의 형성과 이를 통한 동원구조는 강도(유연성/비유연성), 범위(배타성/비배타성), 범주(제도적 집단/비제도적 집단)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은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동원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담론의 틀이 적용될 수 있는 의사소통과 의식공유의 영역 확대를 위한 축이 된다.

셋째 요소는 직접적 행동을 전제로 한 실천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행위(개인적·제도적)에 대립하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행위는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전략과 전술들을 구사하면서, 다양한 행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러한 행동은 흔히 특정 집단에 대한 명시적이고 대립적 관계의 설정을 요구하지만, 때로 비배타적 집단행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사회운동에서 담론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실천적 행위의 수행 없이는 운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넷째 요소는 정치적 기회로서, 운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운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 특히 유리한 정치적 조건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치적 기회의 확충은 사회운동이 추구하는 목적 및 가치의 제도화, 사회운동의 전개를 위한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 사회운동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보장 등으로 이루어진다. 직접적 행동이 내적 역량을 실제화하는 것이라면, 정치적 기회는 이러한 역량의 실제화를 규정하는 외적 조건이며, 또한 이러한 실제화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보다 유리한 힘 관계의 구축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의 이러한 4가지 요소들 가운데 실천적 행위의 수행과 정치적 기회의 확대는 대체로 자원동원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감적 틀의 형성과 사회적 연대의 구축에 관해서는 주로 정체성 지향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두 가지 유형의 이론들을 어느 정도 절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4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진 사회운동의 개념을 통해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들이 서로 배타적인 범주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이다. 예로, 공감적 틀의 형성은 사회적 연대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이를 통해 더욱 확대·심화될 수 있다. 또한 실천적 행위의 수행은 정치적 기회의 확대를 추구하며, 역으로 정치적 기회의 확대는 실천적 행위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공감적 틀의 형성과 사회적 연대의 구축, 그리고 실천적 행위의 수행과 정치적 기회의 확대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보다 활성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서 또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4가지 요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달하고 있는 사회운동의 근본적 목적으로서 사회체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사회적 대립관계(담론적 대립관계 포함)의 역동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운동에 관한 신그람시적(neo-Gramscian) 분석틀을 원용할 수 있다(Carroll and Ratner, 1996; McGovern, 1997). 이 분석틀에 의하면, 사회운동은 반(反)헤게모니의 잠재적 동인으로 이해된다. 반헤게모니적(counter-hegemonic) 운동은 "특정 문제에 봉착한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힘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립의 정치적 프로젝트"로서, 지배에 대한 포괄적 비판과 이에 근거한 새로운 활동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다. 이러한 반헤게모니를 지향하는 신그람시적 관점은 자본주의 경제 및 국가 권력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판과 담론의 다면적 집합으로서 헤게모니에 관한 사회문화적 분석에 기초한다. 반헤게모니를 지향하는 활동가들은 기존의 사회적 및 정치적 배열에 대한 동의를 조

직하는 헤게모니적 가치와 실천에 반대한다. 나아가 그람시의 반헤게모니는 기존의 정치경제적 질서와 힘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적 사회에 대한 전망과 이 전망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연대관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신그람시적 반헤게모니론은 개별 운동의 단편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능가하여, 우리 사회 전체에 대안적 전망의 구축을 가능하게 할 운동들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오늘날 다양하고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운동은 단일 주제나 국지적 배경을 능가하여 지배권력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사고 및 생활의 양식을 구축하도록 하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특히 반헤게모니론은 지배적 또는 현상유지적(status quo) 담론 및 이에 근거한 제도와 질서에 대비되는 새로운 담론의 구축과 이에 따라 상이한 질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집단의 구성, 즉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속에서 대안적 전망을 위한 새로운 공간의 구축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반헤게모니론은 도시 및 지역 정치학에서 논의되었던 (반)성장연합론과 다소 비슷한 내용을 가진다(Logan and Molotch, 1987; Jonas, 1992).[2] 후자의 이론에서 '(지역)성장연합'이란 (지방)정부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도시나 지역 내에 주로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조직체 또는 상호관계망을 의미한다. 한 지역에서 성장을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여러 부류의 개인들(예로, 지역의 기업가, 개발업자, 대토지소유자, 그리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방정부의 관료나 지방 정치가, 그리고 보수적 언론 및 전문가 등)은 이러한 연합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개발과 성장이 지역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적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지역개발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결국 환

2) 이 개념은 그 이후 '도시정권'(urban regime) 또는 도시통치(urban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들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경파괴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항하는 반성장연합(또는 친환경연합)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반성장연합은 반헤게모니집단과 유사하게 성장중심적 정책과 이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집단들을 비판하고 이에 대항하는 연대체의 구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반)성장연합론은 자원동원론의 한 변형으로서 대립적 연대관계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반헤게모니론과는 달리 연대체의 구성에 있어 담론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정체성 지향론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사회운동의 연대활동에서 상이한 운동조직들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는 공통의 개념, 상징 또는 언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담론 자체에 관한 논의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 및 푸코의 지식/권력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을 이루면서, 이들의 담론 이론에 관한 논의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론을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한 논의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담론에 관한 개념을 직접 환경운동의 대립적 연대망의 형성과 역동적 전개과정에 관한 분석에 적용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Hajer, 1995; Dryzek, 1997; 이상헌, 2001).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환경담론은 다른 담론들에 비해 일관된 담론이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환경담론은 예컨대 법적 담론처럼 어떤 규칙성과 일관성을 가진 제도화된 담론이 아니며, 또한 매우 이질적인 분야의 담론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담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환경운동에서 동일한 담론을 사용하는 주체들은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특정한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게 되고 또한 연대망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가치와 이해를 실현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앞서 제시한 사회운동의 4가지 주요 요소들 가운데 우선 담론의 틀 만들기(framing)와 연대의 망 만들기(networking)를 강조할 수 있다.

3. 환경운동에 있어 담론과 연대

1) 담론의 틀 만들기

환경운동에서 동원되는 담론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환경 그 자체 또는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 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환경문제의 핵심은 점점 고갈되는 자원, 그리고 점점 누적되고 있는 대기·수질 오염과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을 사용하고 오염물을 배출하는 인간들의 삶의 방식과 이를 규정하는 사회체제의 전환과 더불어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의 틀 전환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며, 인간사회의 정치·경제적 문제이며, 사회·문화 통합적 맥락의 문제인 것이다. 물론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늘날 제시되고 있는 수많은 환경담론은 다양하며 때로 서로 대립적인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가, 그리고 어떠한 실천방식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환경운동의 담론은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운동의 담론을 구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술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간의 구분을 전제로 할 수 있다(Pepper, 1984; 이명우 외 역, 1989). 이 구분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관련 사항들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예로, 돕슨(Dobson, 1994: 26)은 환경주의와 생태주의를 구분하면서, "환경주의는 환경문제에 대해 '관리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현재의 생산 및 소비의 가치, 또는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생태주의는 환경과 관련한 사회적·정치적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유사하게, 이필렬(2000)은 환경운동단체들이 운동지향과 조건에 따라 반핵운동과 수돗물 불소화 반대운동 등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 '환경관리주의와 생태주의' 사이의 '긴장'관계로 드러내고, 환경운동의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헌(2001)은 개량적 담론과 급진적 담론을 그 속에 함의되어 있는 사회관에 따라 사회체제를 인정하는 담론과 이의 극복을 추구하는 담론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담론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현 사회체제를 인정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량적 담론과 현 사회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생태주의를 강조하는 급진적 담론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들을 각각 '환경담론'과 '생태담론'으로 칭하고자 한다(<표 1> 참조).

환경운동의 담론에서 한 유형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널리 퍼뜨려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이는 사적·공적인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위기의 상황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정책적 제도화를 도모하는 활동이다. 환경위기의 과학적 징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의 관성 속에서 사회는 누적되어온 위기나 새롭게 등장하는 위기에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기 쉽기 때문에 환경운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사회에 배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과 개발 간의 조화'라는 메시지의 창출로부터, 환경운동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펼치는 캠페인, 성명발표, 대중강연, 거리 퍼포먼스 등 대부분의 활동이 이러한 '환경담론의 확산'을 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담론의 확산 전략은 환경문제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부문과 영역의 문제와 맞물려 연관을 맺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알

<표 1> 환경운동의 두 가지 담론전략과 그 특성

특성 / 전략	전략의 내용과 접근	제도 친화성과 목표	환경운동의 위상
환경담론의 확산	—환경인식을 사회 각 부문·영역에 널리 퍼뜨림 —제도 지향적 접근	—제도 친화성이 높음 —사회 정책의 변수로 '환경'의 자리매김	개혁적 부문운동
생태담론의 심화	—생태적 가치 내면화, 민주주의 확장, 자치역량 강화 —비제도적(창조적) 접근	—제도 친화성이 낮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도모	총체적 변혁운동

려내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사회의 기반인 환경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인식되고 사회의 전영역에서 '환경'을 중요하게 배려해야 할 정책 변수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이 전략의 목표가 된다. 그러므로 이 전략에서는 시민사회 영역을 넘어서 국가와 시장영역과의 관계가 반드시 비적대적일 이유는 없으며, 환경을 고려한 제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이들과 제도적 협력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환경담론 전략은 신그람시적 반헤게모니의 구축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무분별한 성장이나 개발에 따른 자연파괴나 환경오염에 반대하는 반성장연합(친환경연합)의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담론에 기초한 환경운동의 사례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다른 한 유형은 사회·정치제도적 차원의 문제만으로는 생태위기로 인한 파국을 지연시킬 뿐이며, 진정으로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태주의적 인식을 심화하고 내면화하는 실천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전략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생태담론의 심화' 전략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전략에 의하면, '자연과 인간의 상호조화와 공생'을 추구하는 생태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영역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문순홍, 2000b).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시민사회의 성숙도나 민주적 시민의식의 내적 성장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 제도는 발전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인간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담론의 심화 전략은 제도로부터 사회 성원들의 인식을 계도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도는 사회 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민주주의의 확장, 분권화, 자치역량 강화 등에 주된 관심을 두고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도모하며 풀뿌리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역공동체 운동, 생산-소비 제휴활동 등 아래로부터 사회를 재편해가려는 전략이다. 제

도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풀뿌리 시민역량을 억누르거나 관료주의적·전체주의적 제도 접근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담론의 심화 전략은 반성장연합의 구축에서 나아가 반헤게모니를 추구한다. 최근의 사례로, '수돗물 불소화 반대운동'은 환경위생·보건사업에 대한 관료주의적 접근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을 주장하는 '생태담론'을 사회적으로 '심화'하려는 환경운동이라 할 수 있다.

환경운동 전략으로서 '환경담론의 확산'과 '생태담론의 심화'는 환경운동의 경향을 구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두 전략은 상호보완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성장 패러다임의 그늘 아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과거 성장 중심의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형성된 환경운동은 아직 분화·발전의 여지를 많이 안고 있어, 전반적으로 '심화를 추구하는 확산'의 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전략이 상호보완적이란 의미는 "깊이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넓게 자리를 잡아야 하며, 넓게 펼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깊이를 가질 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또한 환경담론의 확산과 생태담론의 심화 전략의 상호보완성은 환경운동 과정에서 상호 기회 및 경쟁적 자극을 제공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환경운동의 발전을 이루어간다. 사실 환경운동은 진공 속에서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현실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운동 대상에 작용하는 요인들이 복잡한 만큼 특정한 운동주체가 수행하는 실천 전략은 다양한 측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하여 대형 댐을 반대하는 운동은 전력생산과 연관되어 대체에너지 개발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에 미친 영향은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과 지역 순환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강조하는 운동은 이로 인한 에너지 수급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아가 핵발전과 같은 국가의 전력에너지 제도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도 있

는 것이다. 이렇게 일련의 환경운동이 특정 인식에 근거를 두고 명확한 자기 규정적 목표를 가진다 해도 그 영향과 성과는 다각·다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운동의 형성기를 거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환경운동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전략이 통합적으로 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두 전략 사이에는 현실적인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략적 차원의 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 환경운동의 상황과 환경운동단체 사이에 인적 교류가 원활한 상황 속에서 담론적 차이에 따른 긴장은 사회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운동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들은 제도화 또는 준제도화된 연대기구들(예로,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각종 사안별 연대기구 회의 등)과 전국환경운동 활동가 워크숍 등을 통해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며, 큰 단체 내에는 이념적 경향이 다소 다른 활동가들이 함께 활동을 하지만 조직이나 활동가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담론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특히 조직 사이의 전략 차이가 환경운동 전체의 갈등으로까지 비쳐질 것으로 보이면, 환경운동 내부에서 그 차이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환경담론의 확산과 생태담론의 심화라는 두 전략에 다가서려는 환경운동 네트워크 안팎의 연대에 관한 고찰이 중요성을 가진다.

2) 연대의 망 만들기

환경운동의 성공을 위해 수행하는 유효한 방안의 하나가 연대활동이다. 특히 연대망의 구축은 상호지원과 상호공감대의 구축을 통해 구체적인 집단행동의 수행 및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 기회의 확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자원동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연대활동은 운동조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원 동원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McAdam and Paulsen, 1993). 다른 한편, 정체성 지향

론의 관점에서 보면, 연대의 망은 사회운동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의사소통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감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강조될 수 있다(Mueller, 1994). 즉 연대망은 다양한 운동조직들 또는 활동가들이 인식하는 문제의 속성에 대한 공통된 관점이나 가치, 그리고 집합적 정체성 의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인식적 실천의 매체가 된다.

이러한 연대활동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운동 영역 내 타 운동단체들뿐만 아니라 문제와 직결된 지역주민조직이나 시민사회 영역 밖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한 부문의 사회운동 내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 여러 부문들에 걸친 운동단체들간, 그리고 사회운동단체와 비사회운동단체들(예로,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 기업, 그리고 지역대학이나 전문가집단들) 간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흔히 연대(coalition)와 네트워크(network)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특히 '연대'라는 용어는 사회운동조직 내 또는 이들간의 관계형성을 지칭하며,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이러한 연대를 포함하여 운동조직을 능가한 지역주민들, 그리고 정부기관이나 기업들과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운동단체들간 및 운동단체와 비운동단체들 간 네트워크에 기초한 이러한 연대활동은 환경운동조직이 환경담론의 사회적 확산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직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대(solidarity)를 강화시켜나가는 실천적 전략이다. 특히 환경운동에서 해당 운동영역 내의 여러 단체들간 및 사회운동의 여러 운동영역들간의 조직망 구성은 개별 운동조직들이 구성의 주체로서 그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일정한 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조직 내의 의사결정 및 실천적 행위과정에서의 민주성과 더불어 정치적 기회 또는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조직의 구성주체 및 이들의 실천적 행위라는 점에서 보면, 네트워크는 연대활동의 외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관계는 연대활동의 실질적 의사결정과 실천전략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대활동은 운동조직의 형식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운동의

활동가들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은 다양한 조직구조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기회가 발생할 때 서로 모여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구조를 형성하거나, 일상적인 시기에는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운동의 여러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들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가 강하게 이루어질 때는 협의를 위한 운동단체들간에 정기적인 모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나아가 연대조직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식적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

정치적 기회 또는 영향력 확대라는 점에서 보면, 네트워크는 연대활동의 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은 실질적인 사회적 힘 관계에 따라 환경운동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하게 된다. 즉, 연대활동은 운동의 외적 조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외적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특히, 다른 사회운동에 비해 환경운동이 연대활동에 많은 역량을 투여하는 까닭은 환경문제가 지니고 있는 종합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환경문제는 일상적이면서도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위기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될 만큼 근본적인 문제이며, 과학기술의 문제로부터 여성·평화·교육과 생산·소비·무역 등 경제문제 및 윤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는 총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운동에 있어 연대활동은 좁은 의미의 환경영역 밖에 있는 다양한 조직이나 기관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규범적·실제적 조건을 구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

연대활동의 범위는 조직구성에 있어 참여하는 주체와 영향력의 확대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통해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두 가지 유형의 담론 전략과 관련하여,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을 위해 구축되는 관계망 또는 네트워크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운동에 참여 또는 지지하는 주체들과 조직들 간의 포괄적인 관계망을 의미하는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은 한편으로 비제도적 관계망으로서의 '운동 네트워크'와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혹은 준제도적) 관계망으로서의 '정책 네트워

<표 2> 환경운동 연대활동의 유형과 성격

성격 / 연대유형	연대의 배경과 형식	제도 친화성과 목표	환경운동 전략 특성	사 례
운동 네트워크 (비제도적 정책 네트워크)	사안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운동단체 및 기타 시민사회 단체들의 결합	—제도친화성 낮음 —사안의 해결과 운동의 지속성 확보	환경담론의 확산과 생태담론의 심화 전략 동시 추구	-댐 건설반대국민연대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한국반핵운동연대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정책 네트워크 (제도적 운동 네트워크)	민관협력 사안에 대한 합의와 제도적 지원에 따른 단체들의 참여	—제도친화성 높음 —정책적 과제달성과 운동의 발전 가능성 모색	환경담론의 확산 전략에 충실하며, 심화 전략은 부차적 모색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에너지시민연대

크'를 포괄한다(<표 2> 참조).

제도적 차원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환경운동의 연대가 제도의 안팎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사실, 환경운동은 비제도적 사회운동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발적이고 전략적으로 제도적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체제에 편입되어 운동력을 상실할 소지와 그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환경운동이 제도권과의 연대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환경담론의 확산을 위해 정책적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환경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는 만큼 제도적 정책단위가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기획·수행할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측면을 지원해야 할 요구가 형성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환경운동은 제도 바깥의 운동 네트워크와 제도 내의 정책 네트워크라는 협력적 연대활동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서, 운동 네트워크(이기호, 1997: 36-37)는 사회운동조직간에 결성된 연대를 위한 포괄적 관계까지를 포함한다. 운동 네트워크는 조직들간에 가시적으로 결합된 형태로서 연대의 틀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운동조직들간의 갈등에서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역동적 관계를 포괄한다고 하겠다. 반면, 정책 네트워크는 사회운동과 정책기구의 민관협력모델에 근거하여 활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활동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을 정

책기구가 담당하는 형태를 가진 연대활동이다. 정책 네트워크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시키는 느슨한 고리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유대관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민관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이 단절되거나 운동의 명분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쉽게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운동 네트워크에 비해 그 역동성은 떨어진다. 운동 네트워크와 정책 네트워크는 환경담론의 확산 또는 생태담론의 심화라는 다양한 환경운동의 전략에 부합되지만, 특히 운동 네트워크는 시민사회 내에서 비제도적인 영역에서의 연대활동이며 보다 직접적으로 생태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생태담론을 추구하는 반면, 정책 네트워크는 제도적 수준의 연대활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담론의 확산이라는 전략에 충실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연대활동의 조직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이나 활동가들 간에 완전히 통일된 연대체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참여하는 조직간 상호관계의 여러 양상들에 따라 크게 협력적 관계와 갈등적 관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이기호, 1997, 40-50). 협력적 관계는 협의, 연합, 연대 등의 유형으로 세분될 수 있다. '협의'는 조직들간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유지되는 가운데 각 조직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슈를 개발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모든 사안과 이슈에 대해 통일된 행동을 하지는 않으며 서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하여 연대를 모색할 수도 있으나 각 운동단체들에 대한 실제적 구속력을 가지기는 어렵다. '연합'은 각 단체의 조직들이 사실상 합병의 형태를 통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연대'는 공동의 결의에 따라 행동을 통일하는 협력관계를 말하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각 조직의 정체성이 충분히 유지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가 구성되면 조직의 개별적 행동을 삼가고 결의된 사항에 따라 공동의 보조를 취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정 이슈에 대응하는 임시투쟁조직의 형태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사안별 공조를 취하는 경우가 연대에 해

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연대라는 개념에는 개방과 협력의 의미가 강조된다.

연대활동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가 강조된다고 할지라도, 조직간에 갈등적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갈등적 관계에 놓인 조직들간에는 경쟁과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극단적인 갈등관계인 적대에 이르기도 한다. 경쟁과 긴장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서로 적대관계에 놓인 운동조직간에는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경쟁'관계란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하여 인식의 공감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운동의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진단과 처방 그리고 운동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환경운동단체들간에는 때로는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긴장'관계란 어느 한 운동조직의 활동이 다른 운동조직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관계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조직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니며 때때로 조직간의 갈등이 심하게 노출되어 공조체계를 이루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4. 환경운동의 담론과 연대 사례

환경운동에서의 담론 전략과 연대활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운동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전략적 시사점을 고찰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동강댐(영월댐) 반대 운동'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활동'을 선정했다. 이 운동은 전형적으로 운동 전략으로서 담론과 연대를 명시적으로 형성했으며, 또한 이러한 전략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운동 사례를 분석하여, 담론 전략과 연대활동의 중요성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동강댐 반대운동

이 운동은 한국의 환경운동사에서 폭 넓은 연대활동을 통해 환경담론과 생태담론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운동을 성공으로 이끈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3] 1990년 영월·단양지역의 홍수피해를 계기로 동강의 영월댐 건설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10년 뒤인 2000년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되기까지 지속된 이 운동은 대립적 담론들의 각축장이었으며,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로 구성된 연대활동의 시범장이었다. 그리고 특기할 사항으로, 운동의 성공으로 댐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었지만, 백지화된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어 동강의 생태적 보전과 주민들의 삶을 둘러싼 운동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1990년 9월 한강 상·하류에 걸친 대홍수를 계기로 동강댐 건설 계획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 포함되고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면서, 동강댐 건설계획을 둘러싼 대립적 담론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시점(1991-1992)부터 1997년 9월 댐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까지는 상·하류에 위치한 정선과 영월의 주민들은 대체로 반대와 찬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영월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홍수방지와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댐 건설에 찬성한 반면, 상류의 정선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수몰되거나 홍수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수몰예정지 주민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 영월에서도 몇몇 단체가 동강댐의 안전성과 자연환경 보존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지역 내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고, 반면 정선지역에서는 댐의 안전성을 주된 이유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운동에는 주민 대부분이 참여하였다.

1990년대 중반 동강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다양하게 확산되었고, 이

3) 문순홍, 2000a; 정진주, 2001; 박순영, 2000; 이근행, 2000 참조. 또한 정책보고서로서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2000a, 2000b 참조. 그외 삼성경제연구소, 2001; 환경운동연합 및 동강보존본부 Website 자료 참조.

에 따라 다양한 연대활동들이 이루어졌다. 1996년 정부는 물 부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34개의 다목적댐 건설과 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의 제도 마련을 꾀하였다. 이에 따라 동강댐 건설 예정지역이 지정고시되면서, 영월과 정선 지역에서 댐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반전되면서 대립적 갈등관계를 드러내었다. 즉 정선지역의 수몰예정지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낮은 보상을 우려하여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하였고, 영월에서는 오히려 반대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댐 건설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러한 점은 당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1996년말 '영월댐 건설반대 정선군투쟁위원회'가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댐 건설 반대의견이 95.7%에 이르고, 댐 건설 반대이유로 대부분(88.4%)이 안전대책, 생태계 변화 및 건강장해 등을 지적하였다(정진주, 2001).

다른 한편, 당시 전국의 주요 환경단체들은 대형 댐의 안전성,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물부족에 대한 수요관리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중앙의 환경단체들이 동강댐 반대운동에 총력을 기울임에 따라, 동강댐 반대운동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산되었다. '영월댐 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이하 '백투위')를 중심으로 영월지역의 반대운동은 중앙 환경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 전국적인 국민들의 동조, 이에 따라 정치적 차원에서 군과 도의 댐 건설 반대 선언 등으로 최고점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수몰예정지 주민 중심의 댐 건설 찬성입장은 반대운동과의 선을 명확히 그었지만, 집단 규모의 한계와 생태가치를 내세우는 반대운동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자, 건설교통부는 댐 안전 및 생태·환경에 관한 추가 검증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1999년 2월초 전문가들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단순 자문역할은 댐 건설 정당화의 명분만 줄 가능성이 크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건설교통부가 댐 건설 강행 입장을 밝혔고, 환경단체들은 3-4

월에 걸쳐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환경단체들의 농성은 국내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종교·학술·문화예술 영역 등에서 2,000여 명의 지지방문을 유도했다. 또한 5월에는 전국의 반대 여론을 댐 건설 예정지역으로 모이도록 하기 위한 '동강 살리기 범국민 한마당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 환경관련 단체들의 실무자들이 "동강댐에 대한 반대를 국민의 집결된 열기로 드러내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영월과 정선의 군수 및 군의회 의원들의 예산지원과 행사참여를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들을 집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동강댐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임을 확신하도록 했다.

여름으로 접어들어 새로운 공동조사단 구성이 논의되었고, 8월 26일 과학적·객관적 방법으로 조사·연구·평가하고 필요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영월댐 건설타당성 종합 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공동조사단은 사안을 원점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댐 건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본래 제안에 비해 환경단체들의 입장이 상당히 관철된 것이었다. 주로 기존자료에 대한 평가와 분석 및 각종 대안에 대한 검토 작업 등을 수행한 공동조사단은 2000년 5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동강댐 건설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이에 따른 대안을 건의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이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영월댐 건설사업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였고, 13일에는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 방침을 최종 확정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댐 건설이 백지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댐 백지화가 가시화되면서 반대 목소리에 묻혀 있던 수몰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중요 사안으로 인식되었다. 사실 백지화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중앙의 환경단체들도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데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 과정은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정부와 언론은 물론이고, 환

경단체들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댐 건설 백지화와 지정고시 해지 이후, 정책적 보상과 지역환경 보전대책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반대운동 과정에서 널리 알려진 지역의 빼어난 생태자원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능력껏' 땅도 팔고, 민박집과 카페도 지어 늘어난 외지인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시재, 2000. 또한 댐 건설 백지화 이후 동강의 실태에 대해 이수용, 2001; 김정수 2001 참조).

이러한 동강댐 반대운동의 전개과정을 우선 담론 전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정부의 개발·공급적 입장과 환경단체들의 수요관리적 입장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댐 건설 계획을 추진했던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로 대표되는 개발·공급론자들은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물수급 차질의 논리만을 되풀이하면서, 석회암 지대 동굴의 안전성과 생태보전 방안에 대한 논란을 이겨내지 못했고, 정책결정권을 손에 쥐고 있었음에도 점점 수세에 몰려 거의 고립되다시피 했다. 이 과정에는 환경론자들은 댐의 생태파괴적 특성을 부각함과 함께 자원에 대한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물절약 캠페인 등을 병행한 전략이 꽤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될 만했다. 둘째, 환경담론의 확산 및 생태담론의 심화 전략의 병행이 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하겠다. 사실 동강댐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동강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운동이 전개되면서, 생태자원의 수몰과 더불어 댐 건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환경위기의식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환경담론의 확산과 더불어, 생태담론의 심화도 병행되었다. 예로, 공동조사단의 평가가 백지화로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새롭게 발견된 7종의 미기록 동식물의 발견과 20여 종의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등 '생태'에 대한 가치의 부각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전략과 관련하여, 동강댐 반대운동은 크게 지역 주민단체들과 중앙의 환경단체들 간의 연대, 그리고 중앙 차원에서의 환경운동단체들과 시

민사회 간의 연대가 중첩되어 이루어졌다.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정선과 영월 지역에서는 삶의 터전 상실 위기와 댐으로 인한 침수 등 안전성 및 보상문제 등을 둘러싸고 댐 반대 운동의 지평이 여러 형태로 형성·변화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의 활동에서 '생태적 관심'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단체들과 중앙의 환경단체들이 연대를 형성하면서, 생태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들간의 연대는 운동의 동기는 달랐지만 댐 건설 반대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조직력이 약한 '백투위'와 지역 주민세력과 연계하고자 했던 환경운동연합의 필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동강댐 반대운동에는 지역주민들의 댐 안전 문제와 중앙 환경단체들의 생태적 가치가 공존하게 되었다. 중앙의 환경운동단체들과 시민사회 간의 연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대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형 댐의 안전 문제도 강조했지만, 또한 '동강'으로 상징되는 환경자원의 생태적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심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운동을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점들에서 동강댐 반대운동은 환경담론의 확산과 생태담론의 심화 전략을 병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운동 네트워크에 기초한 연대활동을 통해 직접적 실천활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운동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강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여러 단체들로 구성된 동강보존본부가 설립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서 빠지게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시민환경단체들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수몰주민들이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 백지화 이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 모임은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불참과 기초자치단체의 의지 부족으로 무산될 상황에 이르렀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운동 네트워크보다는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자 했다. 현재 백지화가 1년이 경과하면서 동강 권역을 아우르는 자치조직으로 지역주민관리협의회가 논의되고 있다. 동강댐과 관련된 환경운동은 앞으로도 운동 네트워크와 정책 네트워크에 기초한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피

해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지역 생태환경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활동

이 운동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쓰레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시협')를 구성하여 펼치는 정책 네트워크 활동으로, 전국에 걸쳐 쓰레기관련 조사, 연구,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4] 이 운동을 위해, 현재 16개 광역단위에 지역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으며, 총 259개에 달하는 시민·환경·소비자·여성·지역운동 단체들이 참여하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담론과 실천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환경담론과 정책 네트워크에 기초한 연대활동으로, 현재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다른 부문의 환경운동에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쓰시협 운동은 쓰레기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정부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던 1997년 8월 국무총리와 민간환경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대책기구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시발되었다. 이후 2차례의 준비대표자회의와 대국민 캠페인, 5차례에 걸친 실무준비 회의를 통해 명칭과 규약, 조직을 정비하고, 이해 10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등 31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쓰레기문제를 공동사안으로 연대하고 각 회원단체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며, 쓰레기문제에 대한 국민환경의식 제고,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제시, 시민들의 생활실천운동 활성화, 환경친화적인 쓰레기 관리, 재활용 체계의 구축,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쓰시협을 창립하게 되었다.

---

4) 운동의 개요 등은 쓰시협, 1999; 2000a; 2000b; 2001b; 2001c, 쓰시협 Website 및 쓰시협 관계자 인터뷰 등 자료 참조.

1998년 사무국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쓰시협은 교육문화·정책연구·시민실천·지역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시민·환경·소비자·여성·종교·교육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나갔다. 2001년 6월 현재 쓰시협은 16개 광역 단위에 모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모두 259개 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5] 쓰시협의 기본 활동은 이러한 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에는 지역별 편재를 부문별 위원회 체계로 재편하였고, 현재 정책위원회, 음식물 감량·자원화, 포장재 줄이기, 유해·산업폐기물, 매립·소각 대안 등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단체들은 위원회별 모임, 지역별 모임,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사업을 점검하며 중앙 사무처를 통해 정부에 정책적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관계망 형성이 가능한 폭 넓은 네트워크는 활동의 안정성과 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확산을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쓰시협 운동의 정부 측 파트너로서 환경부 폐기물정책과가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쓰시협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부 내에 마련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예·결산 업무의 지침으로 삼아 지원하고 있다. 1998년 8억 3,000만 원이 지원된 이후 1999년부터 지난 3년에 걸쳐 매년 5억 8,000여 만 원의 사업운영비가 기본예산으로 지원되었다. 2000년의 경우 활동사업비는 광역별로 1,500만 원씩 기본 운영비로 지원하고, 공동·개별 사업을 선정하여 전체 예산의 80%에 해당하는 4억 6,000만 원을 지역 사업에 인구비례로 배정하였다. 광역별로는 그동안 배정된 지원 사업비를 참여 단체수로 나누어 배분하거나, 경기도협의회와

5) 지역별 단체수는 서울 29개, 경기 61개, 인천 18개, 강원 18개, 대전 7개, 충북 22개, 충남 9개, 광주 8개, 전북 6개, 전남 6개, 대구 10개, 경북 21개, 경남 18개, 울산 10개, 부산 6개, 제주 10개 등이다.

같이 공동사업에 80%를 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쓰시협은 2000년말 지난 3년간의 활동 평가를 통해 2001년에는 회원활동 강화 차원에서 참가단체는 연 5만 원의 회비를 내며, 광역별 안배 없이 정책적 실효성 있는 활동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쓰시협 운동이 쓰레기 감량, 음식물 처리 등에 대한 홍보·계도 등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효율·효과적이라는 면에서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쓰시협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외에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역할은 쓰시협의 지역단체들이 수행하지만, 이 사업이 가정뿐 아니라 학교, 음식점 등 집단급식소들도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쓰시협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내기도 한다. 이러한 협조공문 지원은 기업의 소각시설 조사 등 민간단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쓰시협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 이루어진다. 이것은 지역과 중앙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정부 사이에 정책 네트워크가 환경담론의 확산전략에 기능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쓰시협은 시민·환경·여성·소비자 등 지역과 중앙의 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독자적인 연대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2001년 들어 쓰시협은 폐기물관련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3월에는 1차 국가 폐기물관리종합계획(1993-2001)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단체 제안서를 제출하였다(쓰시협, 2001a). 이처럼 쓰시협은 정책 네트워크로서 정책 수행과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물론 그 영향력은 쓰레기문제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지역과 중앙의 여러 단체들의 연대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연대활동의 주요한 동기이자 동력은 정부의 보조금에 있

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쓰시협의 역량은 제도적 뒷받침과 참가단체들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에 따른 것으로 정책 네트워크의 장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쓰시협 운동을 담론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참가단체들은 기본적으로 환경담론에 입각하여 중앙·광역·지역 단위에서 ①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제안, 입법활동, ②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과정에 대한 시민감시활동, ③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시민실천운동의 활성화 및 지원, ④ 쓰레기문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⑤ 지방자치체의 쓰레기 감량화 노력의 제고와 환경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의 촉구, ⑥ 쓰레기 다량 유발업체 및 유통업체의 쓰레기 발생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쓰시협의 활동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규제완화가 대세를 이루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쓰레기관련 환경규제를 늦추지 않도록 하고, 원인자부담 원칙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온 점 등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 활동, 나아가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중요한 성과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연대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쓰시협은 국가와 민간환경단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력적 관계를 이룬 전형적인 '정책 네트워크' 방식의 연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쓰시협 운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정책네트워크 형태로 기획되었으며, 쓰레기관련 정책의 발전과 사회적 의식을 시민사회의 지역 단위로까지 확장하는 정책적 활동이다. 이에 국가는 활동에 필요한 최소 재원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시민사회는 중앙·광역·지역 단위에 이르는 연대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가 정책적 과제를 민간 차원에서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중앙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의 홍보·감시·계몽 활동으로부터 정책 제안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적 연대활동이다. 제도적 지원을 받는 이 활동을 환경운동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이유는 과거 군부독재 시기의 관

변단체와 달리 활동 참여 여부와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쓰시협은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① 일회용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쇼핑보증금제도 마련, 일회용품 없는 패스트푸드점 개점 등을 통해 일회용품 처리비용에만 국가 재정의 2,000억 원 이상을 절감하고, ② 전국적으로 쓰레기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③ 유해폐기물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배출과 수거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④ 녹색가게, 물물교환장터를 통해 이웃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바꿔 쓰고 나눠 쓰는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⑤ 지역 쓰레기 감시단을 조직하여 행정문제에서 처리문제까지 효율적 관리와 운영 유도에 앞장서고, ⑥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였음을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쓰시협 활동은 그간의 성과로 인해 환경운동의 새로운 틀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쓰시협을 모델로 하여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를 조직하여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하려는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다. 쓰레기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에너지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에너지 시민연대'가 전국의 153개 환경시민사회단체들과 산업자원부의 정책 네트워크로 2000년 6월에 창립하였다. 이제 연대활동을 통한 주체들의 역량강화가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단위의 사업에서는 정책개발보다 캠페인 등의 활동에 여전히 많은 역량이 투여되고 있어, 앞으로 조례 제·개정, 감시, 정책개발로 활동의 전환을 이루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조직들의 역량을 키우는 문제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환경담론의 확산이라는 전략 달성과 생태담론을 심화할 자생적 역량의 강화를 연계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5. 담론 및 연대 전략의 특성과 전망

이상에서 고찰한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에 기초하여, 담론 및 연대 전략의 특성과 앞으로 보다 원활한 전략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몇 가지 과제를 도출해볼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연구된 사례들의 연대 및 담론 전략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연대활동과 관련해서는 연대의 목표, 범위, 차원과 주체, 제도적 수준, 그리고 담론 전략과 관련해서는 담론의 유형, 상징화, 주체들의 인지, 대항담론

<표 3> 환경운동 연대 및 담론 전략의 내용과 특성

특성 \ 사례		동강댐 반대운동	쓰시협 활동
연대 활동의 성격	제도적 수준	-기본적으로 비제도적 수준(공동조사단은 제도적 수준)	-기본적으로 준제도적 수준(환경부의 보조금과 제도적 지원)
	연대의 목표	-동강댐 건설 백지화	-쓰레기 줄이기, 폐기물정책의 효과적 운영
	연대의 범위	-주민단체 및 시민사회 망라	-중앙·지역 포괄하는 전국적 조직
	연대의 주체와 차원	-지역대책위와 중앙환경단체 -중앙 환경단체들과 시민사회	-지역단위의 시민단체들 -중앙위원회와 환경부
담론 전략의 특성	담론 유형	-환경담론 확산: ·수요관리적 담론 ·대형댐 건설 반대 -생태담론의 심화(지역생태계 보전)	-환경담론 확산(쓰레기의 자원화)
	담론의 상징화	-지역생태계 (비오리 등)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주체들간 담론 인지	-생태담론의 인지에 있어 다소 차이	-환경담론의 인식에 별 차이 없음
	대항 담론	-관리주의적 개발공급적 담론	-명시적인 대항담론은 없음
운동의 기타 특성	운동의 전개과정	-일단 종결됨	-현재 진행중
	운동의 성과	-동강댐 백지화 -동강보존본부 설립	-쓰레기 절감 및 자원화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갈등 소지	-수몰예정지 주민과 환경운동단체간 갈등	-별로 없음
	지속성과 안정여부	-백지화로 사안의 소멸, 전망 불투명	-정관 및 보조금이 관건

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운동의 전개과정 및 성과, 갈등 소지 및 지속성 등에 대해 유의하여 각 사례들의 특성을 비교·검토하고, 나아가 담론 및 연대 전략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연대의 제도적 수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강댐 반대운동과 같이 기본적으로 비제도적 접근을 취하는 연대활동은 특정 사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질적 운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체들이 운동의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건이 변화하게 되면, 연대의 틀과 전략도 변하게 되고, 사안의 일단락과 종결 여부에 따라 연대망 또는 네트워크는 해소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연대 활동은 결성선언문과 같은 형태로 운동의 목표와 대상 등을 명시하지만, 연대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대에서 '운동 네트워크'는 '범위의 영향력'을 추구하게 되며, 이념과 활동방식의 현저한 차이가 연대를 깨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어떤 세력이나 단체도 연대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연대의 폭은 활동의 영향력과 여론의 형성 등 운동의 성과에 직접적인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많은 연대 세력을 동원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이와 같이, 연대의 가능 범위는 그 사안이 얼마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연대의 중심세력은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연대의 폭을 넓히게 된다. 연대의 영향력 때문에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하느냐는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참여주체들의 조직적 성과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주도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특정 단체가 연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연대의 주도적 역할과 범위는 성과와 관련하여 갈등의 소지를 남기기도 한다. 또한 연대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어느 한 쪽이 주도하게 됨으로써 성과의 여부와 관계없이 갈등의 소지를 남기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환경운동의 보편적 생태 가치 추구라는 특성이 지니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쓰시협활동과 같이 기본적으로 제도적 접근을 취하는 연대활동은 특정 사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관(예로, 지방자치체나 중앙의 관련부처)과 함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에 기초를 둔다. 제도적 접근을 취하는 이러한 정책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주체들간의 형평성, 역할의 분담과 책임 등이 명확하고, 활동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높다.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사안이라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대의 폭을 얼마나 넓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는 참여하는 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운동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이 얼마나 안정되고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가에도 달려 있다. 즉 정책 네트워크는 제도적 지원체계가 어떻게 참여주체들의 의지를 고양시키는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연대활동이 단순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체로서 환경운동의 과정이 되는 책임 있는 연대를 위해서는 전략적 일정표를 가지고 연대의 형식과 각 주체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이다. 제도적 접근을 지향하는 정책 네트워크가 정관이나 규약을 주체들의 합의로 만드는 것은 주체들 스스로를 독려하고 긴장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대활동에서, 제도적 지원체계는 운동에 필요한 재원과 자율성의 보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의 역량을 키워가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책 네트워크의 일상적 안정성은 주체들의 운동역량을 정체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기도 한다. 쓰시협의 평가에서 보듯이 주체들이 제도적 지원에 의지하게 되면, 대안정책의 개발능력이나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력이 떨어지고 생태담론으로 심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연대에 깊게 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 네트워크는 정보의 교류가 요체인데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와 정책결정의 주체와 정책의 대상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볼 때, 제도영역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

책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의 측면에서 보면 정책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운동의 담론-전략적 특성에서 사례들을 검토하면, 동강댐 반대 운동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는 환경담론 확산전략과 더불어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생태담론 심화전략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즉, 비제도적 접근을 통한 연대활동은 환경담론의 확산과 아울러 생태담론의 심화에 역량을 투여해야만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겠다. 비제도적 접근을 통한 환경운동은 생태담론을 심화할 수 있는 여지를 운동 내에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태담론은 제도적으로 용인되는 환경담론의 확산과 변증법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나 비제도적 차원에서 전개된 동강댐 반대 운동은 제도지향성을 가지는 환경담론과 운동지향성을 가지는 생태담론 간의 잠재적 또는 가시적 충돌로 인해, 운동과정에서 갈등을 잠재했으며 운동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갈등의 소지를 남기게 되었다. 즉 동강댐 건설로 인한 댐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지역환경이 가지는 탁월한 생태적 가치에 따라 댐 건설계획은 백지화되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결국 환경운동연합이 자신의 접근방법을 전환시킨 것처럼 결국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6)]

다른 한편, 동강댐 반대운동의 경우,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상징화하고 결국 이를 통해 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운동의 상징인 동강의 생태계가 댐 백지화 이후 지역의 개발 바람에 파괴되고 있는 백지화 1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나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가시적인 댐 반대운동은 성공을 했으나 본질적인 지역 생태계의 보존에는 미흡한 연대활동이 된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연

6) 그러나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른 피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친환경적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지역 상황을 호전시킨 사례도 있다. 예로, 팔당댐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규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유기농의 도입으로 이를 극복한 경우를 들 수 있다(이상헌·허남혁, 2001 참조).

대활동의 과정에서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도입한 래프팅이 이제 와서는 그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는 주된 요인이 된 아이러니가 빚어진 것이다. 활동과정에서 생태탐사 캠페인을 하고, 동강 보존을 위한 '동강의제 21'을 시도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인식변화를 도모할 장기적 관점의 전략에 많은 역량을 투여하지 못한 점은 환경운동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쓰시협활동과 같이, 제도적 접근을 통한 환경운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담론의 확산에는 더 없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기관이 담론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사안에 대한 환경담론의 확산은 공식적 및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담론의 확산은 운동의 상징화 차원과도 맞물려 반영된다. 담론적 상징을 통한 연대세력 또는 영향력의 확장은 제도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운동에서 중요하며, 따라서 운동의 상징화는 생태담론의 심화에도 작용하지만, 환경담론의 확산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담론적 상징을 통해 "당신과 이 사안이 관계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해당 환경담론은 보다 용이하게 확산되면서, 시민사회는 그 운동에 동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담론은 때로 시민사회를 동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며, 나아가 기존의 제도적 기관이 자신들의 정책적 결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 제도적 환경운동을 위한 환경담론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의 동원을 위한 헤게모니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환경담론에 고취되어 참여하는 환경운동단체들이 자칫 환경관리의 실무자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것은 연대기구 내의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개별 단체 차원에서도 제도적 접근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대활동에도 참여하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과제이다. 사실, 환경을 둘러싼 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윤리와 사회제도의 이분법적 발상(헤게모니/반헤게모니)이 아니라

그것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이다.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의 전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개혁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역으로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치체계와 생활양식의 전환은 관념적인 구호에 머무를 것은 사회운동의 교과서적인 원리하고 하겠다(김호기, 1999: 148).

<표 4>는 이상의 논의를 담론 및 연대활동의 특성에 따라, 제도적/비제도적 접근(또는 정책 네트워크/운동 네트워크)과 환경담론/생태담론 전략 간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환경담론의 확산은 제도적 및 비제도적 접근 양자 모두에서 가능하며, 정책적 또는 자발적으로 설정된 한정된 과제(주어진 사안의 해결 또는 문제 상황의 해소)를 전제로 하지만, 생태담론의 심화는 비한정적 과제(즉 특정 사안을 유발하는 사회체제의 전환을 통해 생태사회의 실현)를 전제로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즉, 생태담론의 심화라는 입장에서 생태사회로의 전환은 생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특정 방안이 비제도적 접근을 통해 운동(네트워크)을 형성하고, 그 다음 운동 목표의 제도화를 위한 활동에 임할 때 가능하다고 하겠다(<표 4> 참조).

환경운동의 담론과 연대 전략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환경운동을 간략히 전망해볼 수 있다. 환경운동에 있어 담론 및 연대 전략은 사회운동의

<표 4> 환경운동 담론과 네트워크 간 관계

운동 전략 / 연대 유형	환경담론의 확산 (환경인식의 제고)	생태담론의 심화 (생태사회로의 전환)
제도적 접근 (정책 네트워크)	-정책적으로 주어진 한정적 과제 -연대형성이 수월하고 갈등 소지 적음 -경제우선정책에서 환경정책으로 정부의 정책 전환이 전제조건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비한정적 과제 -연대형성 가능성 적음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사회의 성숙이 전제 조건
비제도적 접근 (운동 네트워크)	-자발적으로 설정된 한정적 과제 -연대형성이 용이, 갈등 소지 있음 -갈등해소를 위한 생태담론 심화와 민주적 의사결정이 필요	-자발적으로 설정된 비한정적 과제 -연대형성 가능성 많음 -생태담론의 제도화와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 실천이 필요

새로운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한다. 환경위기에 따른 생태의식의 확산과 정치경제적 위기 이후의 시민사회의 성숙은 환경·생태담론의 확산을 통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활동과 참여를 확대시키고, 정치적 기회구조의 유연화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연대의 조건과 계기를 제공한다. 역설적이지만 환경의식이 낮고 환경담론이 아직 확산되지 않은 수준에서는 오히려 전문가 중심의 반공해운동이 필요하며, 그리고 정치적 억압과 배제의 상황에서는 혁명적 패러다임이 선호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의 중요성이나 생태적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 그리고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합법적 공간이 넓어진 상황에서는, 대립적 투쟁이나 비합법적인 정치운동보다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방식이 선호된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온산병 투쟁에서 보듯이 이미 1980년대부터 연대활동을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와 이러한 연대활동 전략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전국적 지역조직을 갖춘 환경운동연합의 발전과 녹색연합 등의 등장은 보다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연대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앞으로 사회구성 단체 또는 집단들간의 대립과 갈등보다는 집단들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환경운동이 더욱 일반화될 것이다.

이러한 연대활동은 기본적으로 환경의식의 보편화를 위한 환경담론의 확산이나 생태적 가치의 수용을 위한 생태담론의 심화전략을 채택한다. 이러한 연대활동은 지역주민조직들과의 협력과 더불어 보다 다양한 시민조직이나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단체들은 현대사회의 환경위기가 정치경제적 제도 전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에서 환경·생태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가 결합된 보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광범위한 시민사회운동(예로, 2000년 총선연대활동)을 주도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대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생태적·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환경운동은 지역의 경제적·특정적 이익과 갈등을 이루기도 한다. 사례에서 살펴본 동강댐 반대

운동에서 수몰예정지 주민과의 갈등은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환경운동은 다른 영역·부문과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과 연대활동을 이루어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연대'에 참여하는 환경운동의 전략은 환경운동이 목표하는 확장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주체적 조건을 형성해가는 것이다(김호기, 1999: 314-318).

특히 지역 사안에 대한 연대활동에서 지역과 중앙의 불균형한 역량은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현실이다. 연대 주체들의 불균형한 역할,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와 결과에 대한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는 길은 연대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전문환경운동단체들이 영향력 확대를 넘어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분간은 연대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들이 지역 사안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환경운동의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사안의 주체가 될 지역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한다는 의지로 연대에 임할 때, 성과 중심의 조급함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와 정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로부터 구체적인 활동을 이끌어내는 현명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문환경운동단체들이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안의 전개가 장기적 전략을 차분히 논의할 만큼 녹녹한 것도 아닐 것이나, 결국 연대를 통해 이루려는 궁극의 성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이 추구하는 보편적 생태이익은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을 통찰하는 논리와 이를 민주적으로 관철하는 과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6. 맺음말

사회운동, 특히 환경운동은 다양한 이유에서 여러 유형의 담론과 연대활동을 추구한다. 특히 환경운동에서 이러한 담론과 연대활동은 상호의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담론은 환경운동의 확산 및 심화를 위하여 인

식틀의 공유 또는 공감대의 구축을 위한 연대망을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환경운동의 연계망 구축은 환경문제의 발생 배경 및 운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 조건에 대한 해석적 도식과 이들에 대한 비판 및 실천적 행위의 수행, 그리고 정체성의 확보 및 대안적 전망의 제시 등을 위한 가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인식틀을 필요로 한다. 공동의 인식틀은 특정한 이슈와 운동조직을 가로질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며, 동일한 담론에 기초한 의사소통을 통해 운동의 주체들을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식틀의 공유는 운동조직 내 또는 이들간 활동가들을 확보하는 수준을 능가하여 문제가 발생한 해당 지역주민들 나아가 일반 시민들이 운동을 지지하고 참여하도록 한다. 즉, 공동의 틀(master frame)은 이질적인 집단들이 공동의 정치적 투쟁을 위해 연대하도록 하여 실천적 행위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환경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운동의 정치를 정당화시켜줌으로써 정치적 기회의 확대에 기여한다(Tarrow, 1994).

환경운동에서의 담론 전략과 더불어 연대활동은 활동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연대활동 자체가 운동의 과정이기도 하다. 환경운동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단절된 고리들을 엮어 서로의 관계성을 확장하는 것이라면, 연대활동은 이러한 연관관계와 인식과 실천을 일치시키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활동은 정치적 기회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 단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실, 최근 환경운동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 못지 않게 주체인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끊임없는 자기비판과 자기부정 그리고 자기혁신은 환경운동의 올바른 전진을 위한 필수요소이다(장성익, 1995). 즉, 환경운동은 연대활동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발전을 위한 환경운동의 자기 성찰은 담론 및 연대 활동을 통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은 같은 성격의 환경운동단체들 사이에서, 여성·

평화·소비자·인권운동 등 새로운 사회운동들과의 사이에서, 노동·농민운동 등 오랜 사회운동의 조직들과의 사이에서, 지역의 환경사안에 대응하는 주민조직과 풀뿌리 사회단체들 사이에서 운동 네트워크를 이루며,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연대로서 정책 네트워크를 이루기도 한다. 정보와 경험의 공유, 정책결정 과정에의 압력과 참여 등을 통해 제도화를 도모하는 환경운동은 동강댐 반대운동과 같이 국가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대통령의 결정을 얻어내거나 쓰시협과 에너지시민연대 등 제도적 연대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연대활동은 환경운동의 환경·생태담론의 확산과 심화 전략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다. '환경담론의 확산'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사회의 전영역에 퍼뜨리려는 전략이며, '생태담론의 심화'는 우리의 의식과 사회질서의 질적 전환을 통해 생태(민주)적 사회의 실현을 꾀하는 창조적 전략이다. 두 전략은 단계적 과정이 아닌 지금 이곳에서 가능한 실천을 통해 서로간에 상승적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는 과정이다. 환경운동은 환경담론의 확산을 통해 사회적 환경인식을 제고하고 제도화시키며, 이 과정에서 생태담론의 심화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선 협력의 파트너이기도 한 국가, 지방정부, 기업 등 성장주도세력의 환경파괴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때로는 이를 묵인·조장하는 지역의 열악한 시민사회는 파괴의 피해자가 되어 생존권적 투쟁에 나서기도 한다. 환경운동은 이들과 연대하여 지역의 생태자원과 시민사회를 보전하고 구축하려는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지향적이고 한정적인 환경담론의 확산전략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비제도적 생태담론의 심화전략으로 전환하여 생태사회의 제도화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 환경운동은 특정 사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생태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영향의 정치'를 넘어서서 '실현의 정치'를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김호기, 1999: 149).

환경운동의 성공 여부는 그 고유의 과제인 운동 네트워크 및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환경담론의 확산과 생태담론의 심화라는 두 축의 환경운동 전략 과제를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배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특히, 시민사회가 미성숙하고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익숙하지 않아, 때로는 연대를 하면서도 차이를 부각하여 서로를 불신하는 우리 사회에서 생태담론의 심화전략은 구사하기 쉽지 않은 전략이며,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환경인식이 늘 경제적 사안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에서는 상당 기간 환경담론 확산전략이 더 유효할지 모른다. 그러나 생태담론의 심화로 나가지 못하면 확산된 환경인식만으로 생태사회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경·생태에 대한 '넓고, 깊은' 인식과 실천이 이루어질 때 연대활동은 환경운동의 발전을 이끄는 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최병두 bdchoi@daegu.ac.kr
이근행 ecolkh@chollian.net

참고문헌

구도완. 1996,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_____. 2000, 「1990년대 전문 환경운동조직의 특성」, 『환경운동의 이론과 전략』, 1998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 중점영역 연구지원 과제.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2000a, 「영월댐 후속대책」,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확정 문건.
_____. 2000b, 『물관리백서 2000』.
권태환·이재열. 1998, 「사회운동조직간 연결망」, ≪한국사회과학≫ 제20권 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김정수. 2001, 「동강생태계 위협하는 난개발」, ≪함께 사는 길≫ 7월호, 환경운동연합.

김호기. 1999,「현대성과 생태학: 환경사상과 환경운동의 흐름과 쟁점」(5장),「환경운동의 구조와 동학」(12장),『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나남출판.

김호기·신진욱. 1994,「환경운동의 새로운 정치적 연대」, ≪동향과 전망≫ 제23호.

노진철. 1997,「현대사회의 비판적 자기성찰로서의 환경운동」, ≪한국사회학≫ 제31권 2호.

문순홍. 2000a,「영월다목적댐의 전국이슈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제언」, 동강댐 건설 문제의 사회문화적 조사연구보고, 한국환경사회학회 창립총회 세미나 자료집, 한국환경사회학회.

_____. 2000b,「민주주의와 환경 결합 논의들의 재구성 — 생태민주화의 설계도 그리기」, ≪한국정치학회보≫ 제34호, 29-49쪽.

박순영. 2000,「'앞강'에서 '동강'까지: 영월댐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경험」, 동강댐 건설 문제의 사회문화적 조사연구보고, 한국환경사회학회 창립총회 세미나 자료집, 한국환경사회학회.

삼성경제연구소. 2001,『한국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사회문화연구소. 1993,『사회운동론』.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송희식. 1991,『존재로부터의 해방』, 비봉출판사

신연재. 2000,「환경운동이론의 과제와 발전 방향」,『환경운동의 이론과 전략』, 1998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 중점영역 연구지원 과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1999,「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사업 백서」.

_____. 2000a,「쓰시협! 99년 평가와 21세기 전망」, 전국워크숍 2000 자료집.

_____. 2000b,「21세기 쓰시협의 혁신과 쓰레기 운동의 과제」, 쓰시협 2000년 전국 워크숍 자료집.

_____. 2001a,「제1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안」.

_____. 2001b,「2000년 사업백서」.

_____. 2001c,「쓰시협 사업 평가와 과제」, 기획예산처 제출 내부자료.

유종선. 2000,「생태주의와 생태주의 환경운동의 미래」,『환경운동의 이론과 전략』, 1998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 중점영역 연구지원 과제.

이근행. 2000,「환경정책 결정 과정과 시민사회」, ≪도시와 빈곤≫ 제44호, 한국도시연구소.

이기호. 1997,「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사회운동 네트워크: 1987-1996」,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이득연. 1998,『환경 운동의 사회학』, 민영사, 한국사회학연구소.

이상헌. 2001, 「물이용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담론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상헌·허남혁. 2001, 「서울의 맑은 물 공급을 둘러싼 환경갈등」, 맑은 물 갈등에 관한 한-호학술토론회 자료집, 91-114쪽.
이수용. 2001, 「댐 건설 백지화 이후 동강의 실태와 보전 방안」, ≪환경과 생명≫ 여름호, 통권 28호, 환경과 생명사.
이시재. 2000, 「동강영월댐 건설예정지주변 주민의식의 분석」, 동강댐 건설 문제의 사회문화적 조사연구보고, 한국환경사회학회 창립총회 세미나 자료집, 한국환경사회학회.
이필렬. 2000, 「환경관리주의와 생태주의의 긴장」, ≪창작과비평≫ 여름호, 통권 108호, 창작과비평사.
임현진·공석기. 1997, 「한국사회와 신사회운동: 운동조직 분석」, ≪한국사회과학≫ 제19권, 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임희섭. 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장성익. 1995, 「왜 환경운동인가?」, ≪환경과 생명≫ 겨울호, 제8호, 환경과 생명을 위한 모임.
정수복. 1995, 「한국 환경운동의 평가와 과제」, ≪환경과 생명≫ 겨울호, 제8호, 환경과 생명을 위한 모임.
정준금. 2000, 「환경운동과 환경정책: 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의 이론과 전략』, 1998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 중점영역 연구지원 과제.
정진주. 2001, 「환경분쟁에 있어서 지역운동사의 전개: 동강댐 건설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창간호, 한국환경사회학회, 도서출판 도요새.
찰스 틸리. 1995, 『동원에서 혁명으로』, 서울 프레스.
최병두. 1995, 「환경위기의 세계화/지역화와 진보적 환경운동」,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엮음, 『세계화 시대 일상공간과 생활정치』, 도서출판 대윤.
_____. 1999a, 『녹색사회를 위한 비평』, 한울.
_____. 1999b,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최병두·이근행. 1999, 「주민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에 관한 연구」, ≪교보·교육문화논총≫ 제1집,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한경구 외. 1998,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솔출판사.
한국도시연구소 환경연구부. 2001, 「녹색정치를 위하여」, ≪환경과 생명≫ 여름호, 통권 28호, 환경과생명사.

Carroll, W. K. and R. S. Ratner. 1996, "Master Framing and Cross-movement Networking in Contemporary Social Movements," *Socio-*

logical Quarterly, 37(4), pp.601-625.

Dobson, A. 1990, *Green Political Thought*, Unwin Hyman(정용화 옮김, 1994,『녹색정치사상』, 민음사).

Dryzek, J. 1997, *The Politics of the Earth: Environmental Discourse*, Oxford Univ. Press.

Hajer, M. 1995,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course: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the Policy Process*, Clarendon Press.

Jenkins, C. 1983,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pp.527-553.

Jonas, A. E. 1992, "A Place for Politics in Urban Theory: the Organization and Strategies of Urban Coalition," *Urban Geography*, 13(3).

Logan, J. R. and H. L. Molotch. 198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McAdam, D. and R. Paulsen. 1993, "Spec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Ties and Activ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pp. 640-667.

McGovern, S. J. 1997, "Cultural Hegemony as an Impediment to Urban Protest Movements," *Journal of Urban Affairs*, 19(4), pp.419-443.

McGurty, E. M. 2000, "Warren county, NC, and the Emergence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 Unlikely Coalitions and Shared Meanings in Local Collective Action,"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13(4), pp.373-387.

Mueller, C. M. 1994, "Conflict Networks and the Origins of Women's Liberation," in Larana, E., H. Johnston and J. R. Gusfield(eds.), *New Social Movements: From Ideology to Identity*, Temple Univ. Press.

Pepper, D. 1984,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London: Routledge(이명우 외 옮김. 1989,『현대환경론』, 한길사).

Tarrow, S. 1994,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s*, Cambridge U.P.